

보도시점 2024. 4. 17.(수) 09:00 배포 2024. 4. 17.(수)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
-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
- 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 요청 10배 이상 급증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 17.(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①영업비밀 보호, ②부정경쟁행위 및 ③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
-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영업비밀 보유 기업 8,123개사(응답 기업 2,500개사, 응답률 30.8%)
-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부정경쟁행위 인지 기업 11,432개사(응답 기업 2,000개사, 응답률 17.5%)
- 상표권 보호 실태조사: 상표권 보유 기업 75,000개사(응답 기업 3,000개사, 응답률 4%)
- 조사기간: 2023년 7월 ~ 11월
- 조사내용: 상표권·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정책수요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을 통한 비대면(전화, 온라인, FAX) 설문조사
- 주관기관/조사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한국갤럽
- ※ 본 조사 결과의 통계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①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붙임 1]

*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평균 징역형량은 14.9개월('22)에 불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②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붙임 1]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 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③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붙임 1]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45.6%),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43.6%) 순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 위조상품으로 인한 수출 등 매출액 감소 약 22조원('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

※ 붙임 1 : 2023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주요 통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장은준 (042-481-5771)

1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요청사항

(단위 : %, 개사, 복수응답)

구분	사례 수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조치 강화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영업비밀 보호 교육 및 상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컨설팅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지원	보안 전문 인력 육성 강화	영업비밀 침해관련 소송의 전문성 제고	없음
전체	2,500	46.4 (1,160)	36.6 (915)	34.5 (863)	24.1 (603)	21.7 (543)	14.6 (365)	12.5 (313)	4.7 (118)	3.1 (78)	1.9 (48)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인적 관리)

(단위 : %, 개사, 복수응답)

구분	사례 수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외부인(협력업체,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퇴직 시 비밀보호 서약서 징구, 퇴직자 인터뷰 등 퇴직자 관리	정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 실시	근로자의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
전체	2,500	37.4 (935)	7.3 (183)	7.2 (180)	6.1 (153)	5.2 (130)

2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단위 : %, 개사, 복수응답)

구분	사례 수	원산지 거짓표시	아이디어 탈취	상품형태 모방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	품질오인 유발	상품·영업주체 혼동
전체	2,000	92.9 (1,858)	90.4 (1,808)	84.9 (1,698)	83.9 (1,678)	76.9 (1,538)	73.4 (1,468)	65.9 (1,318)	46.6 (932)

-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

(단위 : %, 개사)

구분	사례 수	시정명령제도 도입 등 행정조치권 강화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생성 시점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원본증명 제도 마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용이하게 활용하는 절차 마련	거래교섭 과정에서 비밀유지 계약(NDA) 체결 의무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의 전문성 강화 (관할 집중제도 확대 등)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없음	기타 (홍보 확대)	계
전체	2,000	33.9 (678)	25.9 (518)	14.6 (292)	10.1 (202)	9.4 (188)	5.9 (118)	0.2 (4)	0.0 (0)	100.0

3 상표권 보호 실태조사

○ 상표권 보호 관련 지원사업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개사, 복수응답)

구분	사례 수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지원 사업	해외지식 재산센터 (IP-DESK) 지원 사업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제공 사업
전체	3,000	50.2 (1,506)	45.6 (1,368)	43.6 (1,308)	36.3 (1,089)	35.2 (1,056)	35.2 (1,056)	35.0 (1,050)